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Developing Policy to Balance Work and Family for Married Women in Korea

1. 서론

한국사회는 2004년 1.16이라는 극저출산률을 기록하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중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는 일군의 학자가 있다. 실제로,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조되는 후기산업사회로 오면서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이 감소하면, 자녀를 적게 갖는 경향이 증대한다는 설명이나¹⁾, 소비사회에서 아동출산과 소비는 상충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는 해석²⁾ 등 가치관 변화를 지적하는 많은 이론과 논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이상자녀수나 기대자녀수를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현격히 줄어든 현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자녀수를 실제 출산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최 은 영

저출산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1) McDonald(2005) "Very Low Fertility: Its Causes and Remedies"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 자료집.
2) Longman(2004) The Empty Cradle, New America Books.

현상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고에서는 취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의 보육과 육아휴직을 검토한다.

2. 자녀출산의 기제

Becker와 Lancaster의 가계생산이론에 따르면, 가계는 다양한 가정재를 생산한다. 요리, 자녀양육, 건강유지활동, 소비문화활동 등 많은 가정재가 존재한다³⁾. 자녀라는 가정재를 논의에 포함시키면, 자녀수의 결정에 따르는 기제를 살펴볼 수 있다. 가계는 자녀라는 가정재의 소비와 여타 상품의 소비에서 효용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가계효용함수는 소득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며, 자녀라는 가정재의 가격에는 의식주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하는 직접비용 및 부모들의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Longman(200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사회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직접비용은 0세 때 \$11,196에서 만17세 때 \$12,574까지 해마다 만불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합산할 경우 18년 동안 \$211,371에 이른다. 한편, 연봉 \$45,000인 부나 모가 자녀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가정할 때 상실임금으로 측정된 간접비용은 18년 동안 \$823,736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간접비용이 직접비용의 4배에 이른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비용은 자녀수와 강력한 마이너스 관계를 갖게 되고, 가구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비용은 비자발적 소자녀화나 출산연기·포기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효용이라 하더라도 자녀수를 감소시키고 양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육과 육아휴직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간접적 비용을 낮추어 부모가 기대(이상)자녀수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보육과 휴직제도가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다시 풀어 보면, 경력단절이나 노동시장퇴장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가족 양립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일-가족 양립

3) 조우현(2003) 노동경제학, 법문사.

은 보육이나 휴직제도 외에 기업의 관행이나 노동형태에서의 변화 및 각종 가족친화적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아래에서는 자녀의 존재와 경제활동의 관계 및 경력단절의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보육과 휴직서비스의 출산지원대책으로서의 의미를 도출한다.

1) 자녀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학 이론상 결혼과 출산은 여성노동력 공급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크게는 노동공급결정과 임금 등 2가지 측면에 영향을 준다(‘노동시간’ 영향생략). 그 원리를 어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자녀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활동이 보다 많이 요구되면, 기울기가 큰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고, 따라서 시장노동시간이 비시장시간을 대체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주부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지원된다면, 양육을 위해 가정 외 서비스를 활용하는 행동이 일반화될 수 있고, 기울기가 평평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된다(→시장활동 선호). 특히 어린 자녀의 보육·양육이 시간투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 집약적 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시간 투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장노동과 비시장활동(대표적인 예: 가사, 양육)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근로자는 요구임금 혹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을 비교하게 된다. 노동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임금수준인 요구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작으면 노동시장 참여가 쉽게 선택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지 않는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즉, 노동력 참여는 비시장시간의 가치와 부(-)적으로 관련된다. 이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할만한 양질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한계의중임금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조우현, 2003).

비시장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외 가족, 특히 배우자의 소득, 정부로부터의 소득지원이나 양육 관련 현금급여나 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 높아진 소득은 시장시간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소득효과 발생), 시장시간의 공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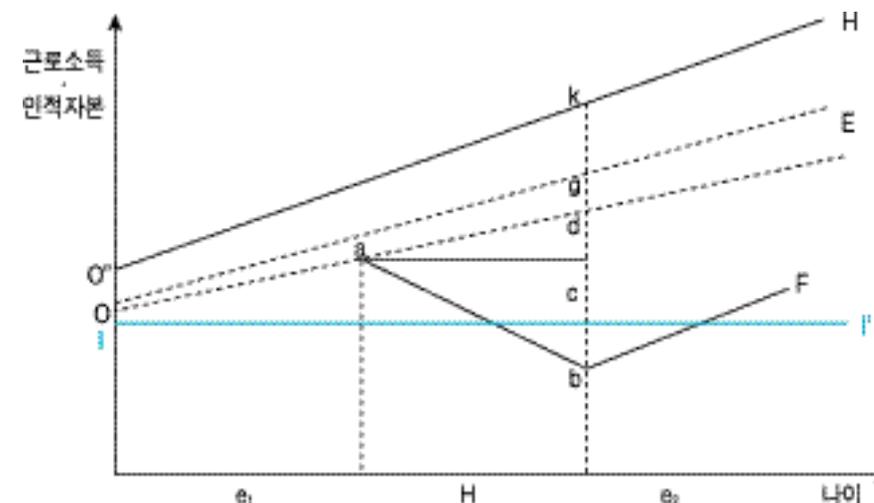
증가시키기도 한다(대체효과 발생). 이 부분은 직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기혼자의 경제활동참가는 결국, 요구임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과 비교해서 낮은가 높은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이 주로 임금과 비근로소득의 함수인데 반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다⁴⁾. 즉,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지원과 더불어 접근성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결정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경력단절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 양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력의 단절이 일어날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된다.

그림 1. 경력단절이 근로자 개인의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료: Mincer and Polachek,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1974. 이정우(2005) “여성취업인센티브의 국가사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인용.

4) Blau et al.,(1998)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 Hall.

위의 그림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여성의 생애근로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녀 임금격차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O^kH 의 임금곡선을 갖는다.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기혼여성은 $OabF$ 의 임금곡선을 갖게 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시점에서(e_2) 남성에 비해 kb 만큼의 소득차이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kb 는 다시, 인적자본의 격차, 기업의 투자격차, 근속연수 상실에 따른 불이익, 인적자본의 부식(depreciation)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자녀의 존재 자체는 국가나 사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여성근로자에게 주로 부가된다.

3.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과 출산율

그 동안 다양한 가족정책, 아동정책,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따라서 일반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통해, 두 제도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OECD 비교연구를 통한 출산율 제고효과

아래의 <표 1>은 Gauthier(2001: Sleebos, 2003에서 재인용)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국가별로 사회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 간의 정책 내용 및 정책의 상이성, 출산에 대한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과 함께 국가 간에 사회경제적 토대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Gauthier는 국가 간의 비교 시에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을 염두에 두고 각 국에서의 사회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모든 국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보육제도의 유무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공공보육제도를 갖춘 국가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

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 국가를 분석했을 때는 동일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보육제도의 유무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이태리에서는 공공보육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 및 공공 보육시설의 유무가 출산율에 주는 영향력이 긍정적이거나, 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용한 자료가 많아서 보다 자세하게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보육비용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Blau와 Robins(1989)는 높은 자녀양육비용이 전업주부의 출산율은 낮추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율을 낮추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양육비용의 활용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Blau와 Robins(1989)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Mason과 Kuhlthau(1992)는 자녀양육비용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활성화시키나 출산율 제고에 미약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들은 보육시설보다는 여성의 취업활동이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취업한 여성은 보육비 지출로 인해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출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Mason and Kuhlthau, 1992). 자아실현과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맞벌이 부부의 세 유형의 보육방법(베이비시터, 친인척 보호, 공식적 영유아보호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Lehrer와 Kawasaki(1985)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출산율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베이비시터의 활용가능성과 비교해서 공식적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결과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공보육시설의 수적인 증가만으로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보육의 질,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및 운영형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주요 OECD 국가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

국가	연구자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
전체	Castle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제도 •정부의 보육지원 •양육휴가 •가족지원 현물급여 •Flexi-time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제도의 영향력은 매우 유의함. •Flexi-time제의 영향력은 약함. •다른 정책의 영향력은 미약
독일	Hank and Kreyenfeld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제도 유무 •사회적 지원망을 통한 보육 가능성 	•유의하지 않음.
이태리	Del Boca(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제도 •시간제 근무 기회 	•긍정적
노르웨이	Kravdal(1996)	•보육시설	•약하나 긍정적
스웨덴	Walker(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ental Benefit •공보육시설 •아동수당 	•약하나 긍정적
미국	Blau and Robins(1980)	•보육시설 및 비용	•보육시설은 긍정적. 그러나 고액의 보육비가 이를 상쇄
	Lehrer and Kawasaki(1985)	•자녀보호자 존재 여부	•자녀를 돌볼 친인척 유무가 출산을 제고
	Mason and Kuhlthau(1992)	•보육시설공급 및 보육비 지원 정	•응답자의 10%에서만이 보육시설이용의 어려움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음.

자료: Gauthier A.H.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Families and Demographic Behavior", Sleebos, Joelle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2003, 김미숙(2004)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과 출산률", 여성사회활동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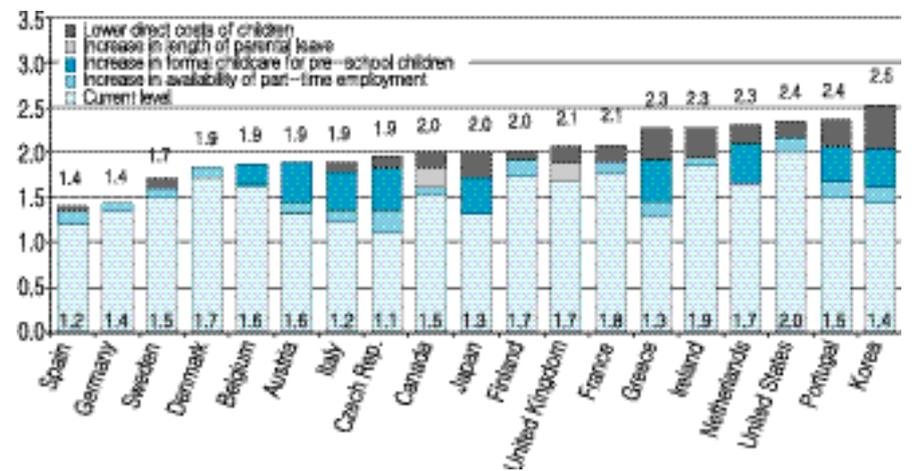
한편, OECD는 2005년 새로운 종합연구⁵⁾를 통해, 직접적 비용지원, 육아휴직, 보육, 시간제 근로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OECD내 상위권(1~3위) 국가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각 국에서 기대되는 출산률 제고효과를 예측하였다. 한국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세 가지 정책에 힘쓸 경우 UN기준 합계출산률 1.4에서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제시되었다(그림 2 참조). 정책항목별로 좀 더

5) d'Addio and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자세히 살펴보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1명 중 직접 비용지원을 통한 기대효과가 47%, 보육의 확대가 38%, 근로형태의 다양화(시간제 활성화)가 15%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취업률과 출산률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twin goals)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면, 육아휴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취업모의 경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대체율이 100%가 아닌 경우(대체로 휴가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낮아지는 소득으로 이동을 꺼리는 계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한국의 시간제 근로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에 비하면, 기대효과가 매우 낮게 추정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 근로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과 제반 사회서비스의 특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간제 근로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OECD 본부가 신중한 해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2. potential impact of various policy reforms on total fertility rates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3~6세까지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양육을 위한 경력단절이 저연령층 아동을 둔 어머니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보육관련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in-kind)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보고 되었다. 1998년 이후 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home care allowance를 지급하기 시작한 노르웨이의 경험이 그 이유를 알려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현금정책 도입 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단기적으로 7~8% 감소하였고, 장기적으로는 16%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2) 취업증진과 출산의 동반 지향

그렇다면, 출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출산을 동시에 지향하기 위해서 육아휴직보다 보육서비스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온 자녀-여성경제활동간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표 2>는 아동보육정책의 우수성을 시설 보급율(availability)과 비용 지원(affordability) 양 측면에서 살펴보되, 복지국가 유형(regime)에 맞추어 대별해 본 것이다. 미약한 사회적 지원이 있는 나라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에 아동이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어권 모든 국가에서는 아동의 존재가 어머니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르딕 국가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취업 불이익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증적 비교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 등을 극명하게 밝혀준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중임금을 낮추었을 때 시장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시간 집약적인 양육을 사회화하여 지원해 주었을 때, 시장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이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 공공보육의 확보와 보육비의 지원을 통한 의중임금 낮추기, 아울러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6) Kornstad and Thoresen(2002) "A discrete choice model for labor supply and child care" Statistics Norway, Discussion Papers No.315.

표 2. ECEC(아동교육 및 보육)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

	ECEC의 사회보급도 (공급/비용에서의 가용성)		아동으로 인한 모성 취업에의 불이익 (penalty) ¹⁾	
	0~2세	3~5세	모성취업 감소 (자녀 0~2세)	모성취업 감소 (자녀 3~5세)
사회민주주의 국가				
덴마크	고/고	고/고	0%	0%
핀란드	중/고	중/고	0%	0%
노르웨이	중/고	중/고	-29%	-27%
스웨덴	고/고	고/고	0%	0%
보수주의 국가				
벨기에	중/고	고/고	0%	0%
프랑스	중/고	고/고	0%	0%
독일	저/저	중/중	-25%	-117%
이탈리아	저/저	고/고	n.a.	n.a.
룩셈부르크	저/저	고/고	0%	0%
네덜란드	저/저	고/고	-25%	-21%
자유주의 국가				
호주	저/저	중/중	-35%	-15%
캐나다	저/저	중/중	-15%	-10%
영국	저/저	중/중	-45%	-31%
미국	저/저	중/중	-22%	-15%

주: 1)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Gornick and Meyers(2003)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 한국의 양육여건 진단: 여성고용과 보육 · 휴직제도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한국은 출산률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나라로 분류됨.
- # 한국은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모성의 취업률이 모두 낮은 나라로 분류됨.
- #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은 10% 미만으로 OECD 23개국 평균인 23%에 크게 못 미침.

- # 한국은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이 고원형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M-curve 상태임.
- # 한국의 출산·육아휴직기간은 OECD기준에서 볼 때 매우 낮으며, 소득대체수준 역시 OECD 평균인 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2004년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데이터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근로소득 구간 및 아동수별로 취업모가 취업중단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 3. 보육대상 아동수별 취업중단 경험

(단위: %, 명)

구 분	월평균 소득(285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285만원) 이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취업중단 경험 있음	60.6	28.3	40.3	11.7
취업중단 이유				
직접 아이를 키우기 위해	46.7	12.7	42.4	38.9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20.3	44.6	21.7	22.7
보육료 부담	4.9	3.7	1.2	-
해고, 인사상 불이익, 동료 눈치 등	5.2	3.1	3.9	6.8
건강문제·산후조리	12.4	16.6	15.1	15.7
일-가사노동 이중부담	10.5	19.2	15.7	16.0
계	100.0 (321)	100.0 (66)	100.0 (228)	100.0 (31)

자료: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평균소득 미만 가정에서는 60.6%가, 평균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40.3%가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고, 취업중단 이유 중 비자발적인 이유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 전국 보육이용실태 및 수요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3,904가구의 기혼여성 중 15.2%는 결혼 후 직장생활과 양립하기 힘들어서 출산을 조절한

경험이 있다. 1,723명의 기혼 취업여성 중 30.7%는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을 호소하였고, 23.1%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을, 8%는 긴급상황시에 지원체계가 미비함을 양육시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4>를 보면, 시간제 보육과 야간 보육에 대한 수요가 63.4%, 41.3%로 매우 높고,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도 각각 20%를 넘어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취약보육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있음					없음	계	(수)
	상시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1년에 1~2회	소계			
시간제 보육	17.8	27.8	15.6	2.3	63.4	36.6	100.0	(2,963)
야간 보육	11.5	13.0	13.6	3.1	41.3	58.7	100.0	(2,962)
24시간 보육	3.6	2.4	7.1	7.5	20.6	79.4	100.0	(2,962)
휴일 보육	2.9	3.8	11.1	6.9	24.7	75.3	100.0	(2,962)

자료: 2004 전국 보육실태 및 수요조사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가족 양립형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 5), 미혼남성과 여성 및 기혼여성 모두 2자녀를 기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기혼여성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남성 제외).

기혼여성에 비해서 미혼남녀는 2자녀를 기르면서 전일제를 선호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현재의 미혼자가 향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 그들의 선호가 충족되려면, 자녀양육-시장노동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혼인상태, 성별 및 교육정도별 일-가족 양립형태 선호도

(단위: 명, %)

구 분	미혼				기혼(여성)	
	남성		여성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전체	650 (44.3)	816 (55.7)	361 (30.0)	844 (70.0)	2,419 (63.6)	1,381 (36.3)
무자녀+전일제 근무	2.5%	3.3%	2.8%	3.1%	1.8%	2.4%
무자녀+시간제 근무	0.5	0.6	0.3	0.4	0.7	0.2
무자녀+비취업	0.6	0.2	0.0	0.1	0.1	0.2
1자녀+전일제 근무	9.5	10.9	9.2	14.2	4.8	7.8
1자녀+시간제 근무	10.2	10.3	11.7	11.1	9.2	11.3
1자녀+비취업	2.6	1.1	3.1	0.8	1.0	0.7
2자녀+전일제 근무	18.3	23.3	18.9	22.2	11.1	11.4
2자녀+시간제 근무	36.3	36.4	38.4	37.8	55.8	51.9
2자녀+비취업	19.5	13.8	15.6	10.3	15.5	14.1

자료: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표 6. 맞벌이 및 기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별 자녀수 달성도와 정책수요 및 자녀계획

(단위: 명, %)

구 분	맞벌이 여부		기혼여성 근로(사업)소득 구간		
	비 맞벌이	맞벌이	소득 없음	평균 미만	평균 이상
전체	2,201 (57.9)	1,601 (42.1)	293 (16.2)	865 (47.7)	655 (36.1)
이상자녀수 달성여부*					
초과	10.8%	10.2%	13.7%	11.9%	7.3%
같음	42.1	39.6	40.6	45.1	39.1
미달	47.1	50.2	45.7	43.0	53.6
출산 지원정책 수요도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지원	7.4%	6.2%	5.4%	7.2%	6.5%
불임부부의 치료지원	5.7	5.1	3.4	4.8	4.1
태어나 임신부의 건강지원	1.2	1.5	1.4	0.9	0.6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 휴가	7.0	7.7	5.4	9.5	10.2
자녀 간호휴가	3.2	3.1	3.1	4.5	3.5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 휴가	1.0	0.9	1.0	0.3	1.4
취업모에게 탄력근무제 운영	10.8	10.9	9.2	9.5	13.8
취업부에게 탄력근무제 운영	0.2	0.6	0.3	0.2	0.6

<표 6> 계속

구 분	맞벌이 여부		기혼여성 근로(사업)소득 구간		
	비 맞벌이	맞벌이	소득 없음	평균 미만	평균 이상
질 높은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18.8	18.6	18.4	14.2	23.9
영유아 보육비 지원	13.3	13.7	14.6	13.3	9.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우선분양	3.9	2.6	1.0	4.8	3.5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2.1	1.9	0.7	2.7	2.0
아동 양육수당 지급	7.5	7.6	9.2	6.4	7.1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2.0	2.4	4.1	2.3	1.5
연금 보험료 부담경감	1.0	0.7	1.0	1.6	0.6
아동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2.5	2.2	3.1	2.4	2.0
방과후 교육 지원	4.5	6.1	7.1	5.7	4.3
다자녀 실직가정취업 지원	1.9	1.7	2.0	2.3	1.2
다자녀 가정 학비지원	5.3	6.1	8.2	6.9	2.9
기타	0.7	0.4	1.4	0.5	0.9
추가자녀계획 유무					
있다	16.0%	18.6%	8.8%	11.1%	24.9%
없다	80.0	76.6	88.5	85.4	70.6
미결정	4.0	4.7	2.7	3.4	4.5

주: *(이상자녀수-출생자녀수)가 0이면 같음(=달성), 음(-)의 값을 가지면 초과, 양(+)의 값을 가지면 미달로 정의.

자료: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부부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맞벌이), 이상자녀수 달성률이 낮았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미달률이 높았다. 자녀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해석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기혼여성이 선호하는 출산지원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 공급, 보육비 지원, 어머니의 탄력근무제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흥미롭게도 OECD 2005년 보고서에서 추천한 정책의 종류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모든 대상별로 크게 요구된 제도는 임신출산 비용지원, 출산과 육아 휴가, 아동수당 등 이었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정책 수요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방과후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맞벌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이 낮은 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보육비지원, 양육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학비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층

여성은 휴가, 탄력근무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5. 결 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이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보육 및 휴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여성에게 친화적인 고용 및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 OECD국가들의 출산률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히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소비자 수요충족
- 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 출산 및 육아휴직의 탄력적 운용 (기간 및 시기)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대체율의 제고
- 육아휴직의 부·모 할당분 지정

가족의 전통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과거의 성별 노동분업 체계를 고수하는 사회 일 수록,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일변의 정책기조를 가진 사회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부모가 노동시장 근로와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겪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은 이러한 괴리를 줄이는 작업이어야 하며, 크게 보면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장-가족-국가의 역할분담 구조, 여성-남성의 역할분담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어떠한 복지체제(welfare regime)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구 모형은 완전고용의 추구·여성 노동시장 참여 추구하고 양성평등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출산장려와 가족지원의 1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 어머니 역할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고수하는 독일도 존재하고, 비 개입 혹은 빈민 층에만 개입하는 영-미 모형도 존재한다. 복지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다른 제도나 다른 정책과의 조율 및 방향검토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종합적이되 효과적이고 초점이 있는 정책기조를 구축하여야 하는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